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 ~ '27]

2023. 5. 17.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수립배경 및 경과	1
1. 수립배경	1
2. 수립원칙	1
3. 수립경과	2
II. 정책 여건	3
1. 국내 정책 여건	3
2. 외국의 정책 동향	6
III. 고독사 현황 및 특징	9
1. 고독사 정의	9
2. 고독사 현황 및 특징	11
3. 고독사 위험군 규모(추정) 및 특징	14
IV. 비전 및 목표	15
V. 세부 추진과제	16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16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19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및 사후지원	23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30
VI. 향후계획	36
VII. 과제별 추진일정	38

I.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 (정책방향)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를 위해 ‘고독사 예방’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기본계획 수립 근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주요내용) ①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기본방향, ②실태조사, ③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④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⑤고독사 예방 사회환경 조성 등

2. 수립원칙

- (포괄적 정책 연계) 고독“사(死)” 대응 뿐만 아니라 생전에 “고독”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광범위한 연계 추진
 - * 지역사회보장계획(‘23~’26),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건강가정기본계획(‘21~’25),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22~’26),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2~’26) 등
- (지역별 여건·특성 반영)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여건·특성 차이*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탄력적 접근 추진
 - * 고독사 위험군 수, 주된 주거유형, 의료·돌봄자원 수준, 민·관 협업 경험 등
- (사생활의 평온 존중) 1인 가구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존중* 필요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립경과

- ('21.7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고독사 발생현황, 사망자 특성 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실시

*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21.7~'21.11),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22.4~'23.2)

- ('21.9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기본계획 수립 사전기획 연구('21.9~'22.3), 기본계획 수립 연구('22.6~'22.11)

- ('22.4월~) 기본계획 과제 발굴·협의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등 8개)·지자체(국·과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총 20인 구성

- 기본계획 과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수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강증진개발원, 한국전력공사, 네이버, 손해보험협회 등

- ('22.8월~) 지역주도형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 9개 시·도(3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연구 병행 진행 중('22.7월~, 보사연)

- ('22.12월) 공청회* 통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발표·의견수렴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 김미애 의원실 주관, '22.12.14.)

- ('22.12월) 고독사 실태조사('17~'21) 결과 발표

- ('22.12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구성('22.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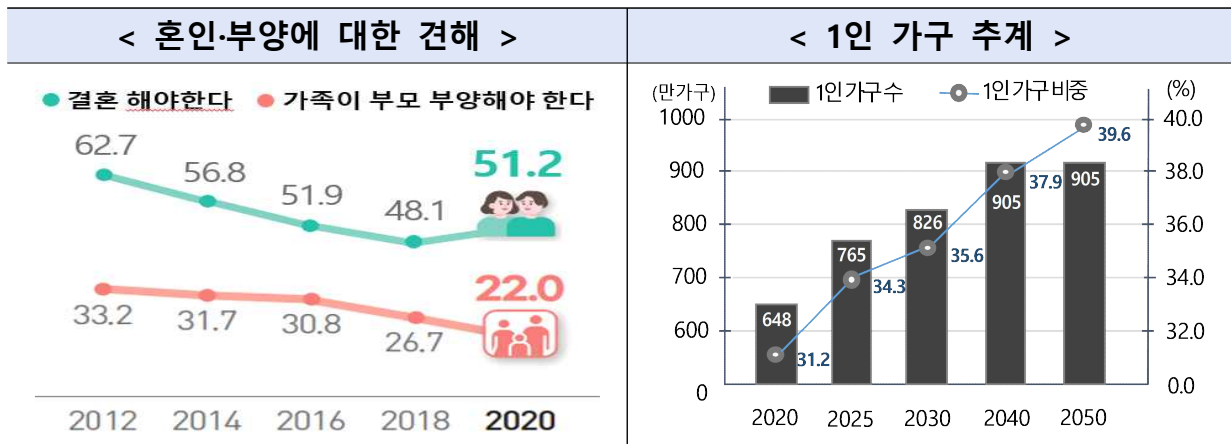
- ('23.5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23.5.8.~'23.5.10.)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23.5.17.)

Ⅱ. 정책 여건

1. 국내 정책 여건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 및 단절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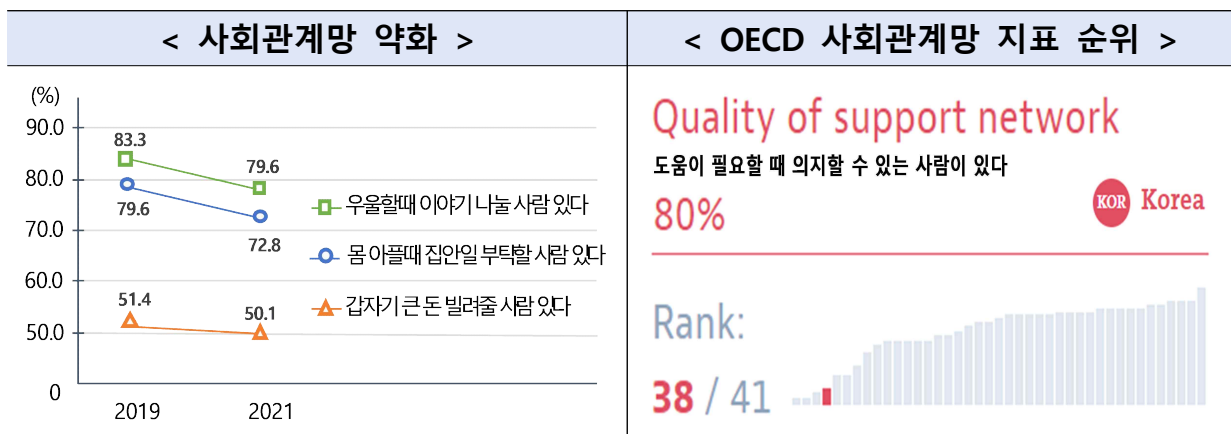
- (가족돌봄 약화)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전통적 가족돌봄 기능 지속 약화



자료: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 (사회관계망 약화) 개인주의 문화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고립·단절 심화

※ '22년 OECD 사회관계망 지표(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OECD 평균(91%), 한국(38위/80%), 영국(22위/93%), 일본(29위/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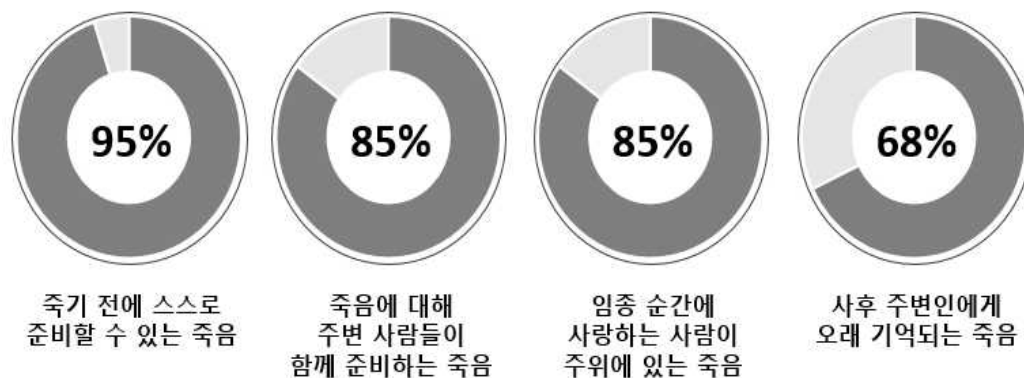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 OECD, 「Better Life Index 2022」

□ 고독사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대응 필요

- (고독사 증가) 생전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어 사망까지 이어질 경우, 누구의 지원도 없이 사망 후 발견되는 고독사로 직결
 - '21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증가율 연평균 8.8%)로서,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 필요
 - (존엄한 죽음 보장 필요)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사망 형태로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필요
 -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장*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동의율)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

- (사회적 피해 방지 필요) 고독사 시신 방치·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들의 정신적 외상 역시 정책개입이 필요한 영역
 - 고인을 외롭게 방치했다는 죄책감, 현장* 목격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체계적 심리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필요
- * 장기간 시신 방치로 인한 부패·훼손 및 시취 발생 등

□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

○ (대응기반 미약)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로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업무 네트워크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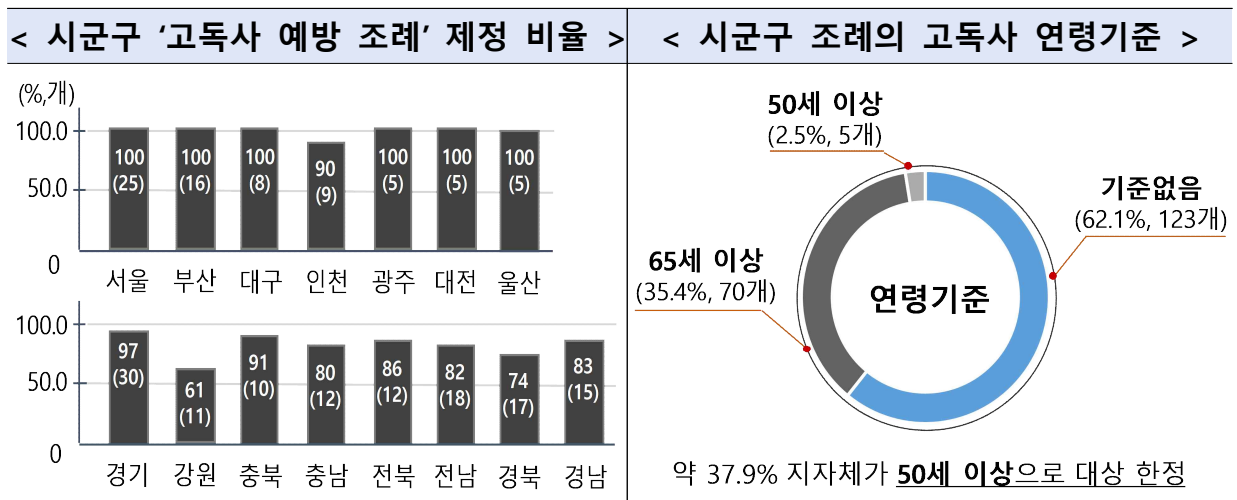
- 위험군 발굴, 상담·조사, 서비스 연계·지원,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관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체계적 협업 시스템 미구축
- 고독사 통계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를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없는 상황
- 지자체 내 고독사 업무 담당부서 불명확, 인력 부족*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협업** 미흡

* 229개 시군구 고독사 업무 담당인력은 총 251명(전임 70명, 타 업무 겸임 181명 / '22.10월)

**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별(건강관리·돌봄 등) 서비스가 이미 여러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이나,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조정 미흡

○ (법률-조례 불일치) 대부분의 시군구(198개)가 '고독사 예방 조례'를 시행 중이나, 일부는 고독사 범위를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

* (예시) 법률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198개 시군구 중 75개(37.9%) 시군구는 연령 기준으로 고독사 범위를 제한(50세이상 : 2.5% / 65세이상 : 35.4%)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3.4월 기준

2. 외국의 정책 동향

❖ 사회적 고립·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 담당조직 운영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결·지원 강화 추진 중

□ 영 국

○ 외로움(고독) 담당 부처*(Ministry for Loneliness) 지정('18.1.)

* 별도조직 설치 없이 문화·미디어·체육 담당 부처의 장을 외로움 장관으로 지정

○ 외로움 대비 범정부 전략(loneliness strategy)* 발표('18.10.)

* 전략명 :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ty :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외로움 실태 파악, 공동체 공간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예술·문화·체육 활동 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 일 본

○ 내각관방(국무조정실 해당)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 설치('21.2.)

○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 발표('21.12.)

- 고독·고립 실태 파악, 공동체 공간 조성, 비영리단체 지원, 복지·의료·고용 등 분야별 대책과 연계한 지역 안전망 구축 등

□ 기 타

○ (미국) 비영리 식사배달 봉사 네트워크(Meals on Wheels), 은퇴한 노인 공동체(NORC)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방지 추진 중

○ (프랑스) 세대 간(고령자-청년) 동거 프로젝트(Cohabitation), 민간단체(MONALISA)를 통한 독거노인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중

◆ 영국 「범정부 전략」의 주요과제

분야	추진과제	주요내용
실태파악	외로움 실태 파악	각 지역 단위별 외로움 수준 측정·발표
대국민 지원	공동체 공간 조성	공동체 공간 구축 펀드(Space to Connect Fund) 운영
	사회적 관계 교육	초·중학생 대상 사회적 관계 교육 과정 의무화
	스포츠 활동 지원	중·고령자 대상 스포츠활동 지원
	예술·문화 활동 지원	예술 분야 파트너십 통해 커뮤니티 활동 지원
거버넌스	지역사회 지원단 구성	민간 지원단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관계부처 협력	외로움에 대한 주기적 정책토론(장관급) 개최
	지자체 모범사례 공유	지역 주도 서비스 모범사례 발굴·공유
디지털 활용	사회적 지원 DB 구축	영국 전역의 사회적 지원 전달체계 DB 구축
	e-러닝 프로그램	외로움 주제 e-러닝 프로그램 운영
문화조성	#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	유명 인플루언서가 주최하는 외로움 주제 캠페인
	#i will 캠페인	청소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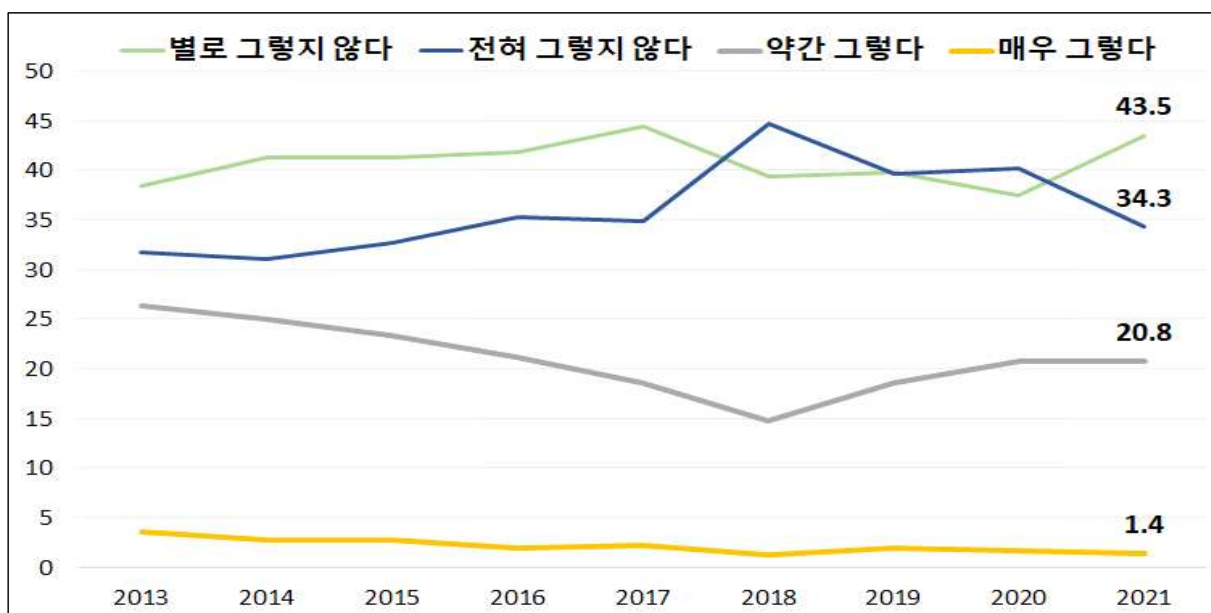
◆ 일본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 주요과제

분야	추진과제	주요내용
지원 요구를 높이기 쉬운 사회	고독·고립 실태 파악	고독·고립 수준 전국조사, 각 부처별 관련 통계조사 개편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고독·고립 대책 및 각종 서비스 정보가 망라된 포털사이트 구축
끊임없는 상담 지원	상담·지원체계 정비	전화·SNS 24시간 상담, 인권 상담, 학생 정신건강 상담, 구직자 취업지원 등
	상담 인재 육성	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복지사 양성,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직원 연수 등
연결을 실감할 수 있는 지역 조성	공동체 공간 조성	고령자 공동체 공간 지원, 치매카페 보급, 평생 활약 거리 구축 등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히키코모리 지원, 비행소년 지원, 출소자 지원, 스토크 피해자 지원,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등
비영리단체 지원	고독·고립 활동 비영리단체 지원	히키코모리 지원단체 지원, 지역 여성 지원단체 지원,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한국·일본·영국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영국
통계 출처		통계청	내각관방 고독·고립 담당실		문화·미디어·체육 담당 부처
조사 기간		'21.9~'21.10	'22.12~'23.1		'21.10~'22.9
조사 대상		19세 이상	16세 이상		16세 이상
표본 규모 (응답자 기준)		8,077명	11,218명		10,126명
조사 질문		나는 외롭다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나? (How often do you feel lonely?)		
이 단 기	전혀 그렇지 않다	34.3%	전혀 없다	23.7%	21%
	별로 그렇지 않다	43.5%	거의 없다	38.9%	32%
	약간 그렇다	20.8%	가끔 있다	17.4%	22%
			때때로 있다	14.5%	19%
	매우 그렇다	1.4%	자주 있다	4.5%	6%

◆ 한국 변화 추이('13~'21)



Ⅲ. 고독사 현황 및 특징

1. 고독사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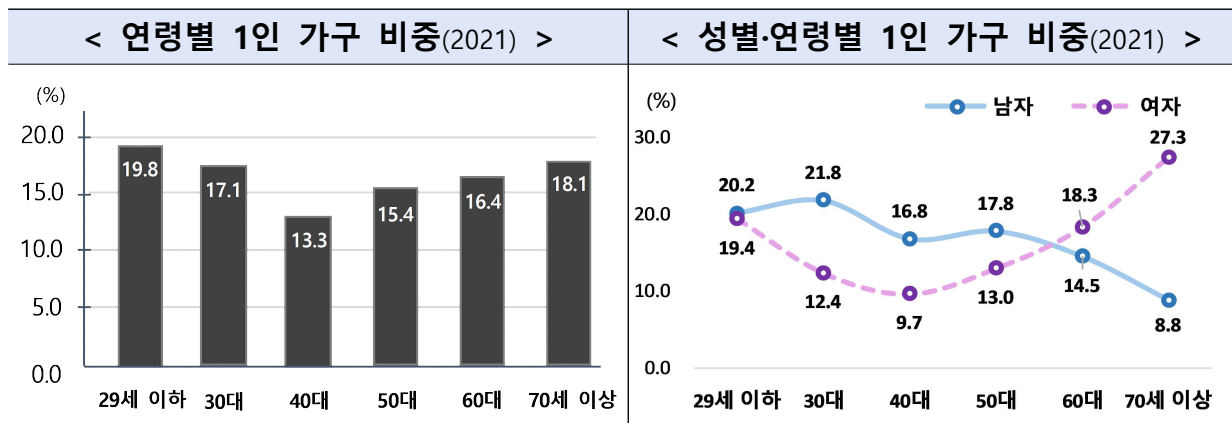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①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사망 시 고독사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23.2.24, 상임위 통과)

□ (사망 전)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 가족·친척, 직장·종교·이웃 등 각종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채, 동거인 없이 홀로 사는 1인 가구(연령 기준 無)



자료: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사망 시) “혼자 임종을 맞고”

- 의료기관 등이 아닌 주거지 내에서, 자살·병사·사고사 등(범죄행위 제외)으로 보살핌 없는 상태로 홀로 사망

□ (사망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

-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 기간* 방치된 후 발견

* 법률상 기준은 없으나, 일부 지역(서울·부산)은 자체 기준(3일)을 적용하여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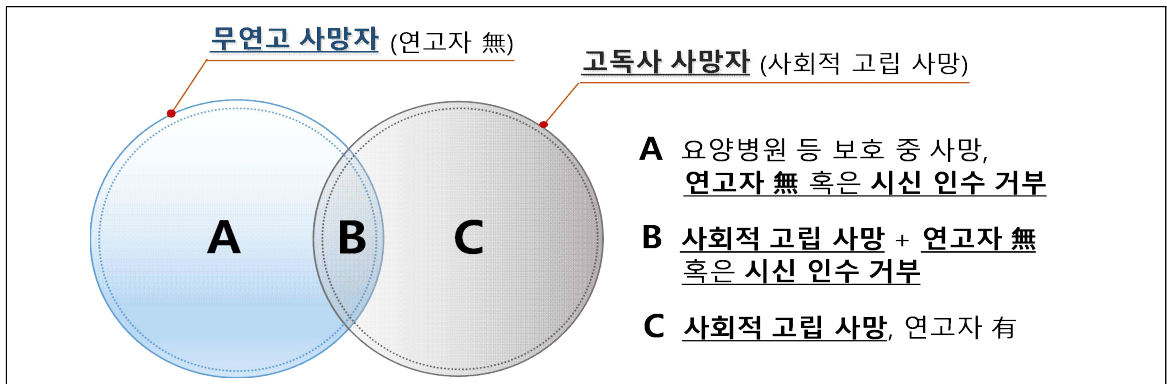
◆ 무연고 사망자 <정보보유 기관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정의) ①연고자*가 없는 사망,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을 의미

*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의미

※ 최근 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 ('19)2,656명 → ('20)3,136명 → ('21)3,603명

- (고독사와의 차이) 무연고 사망은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 존재 여부가 핵심으로, 가령 요양병원 치료·보호 중 사망 시 사회적 고립이 아니므로 고독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신 인수할 연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사망에는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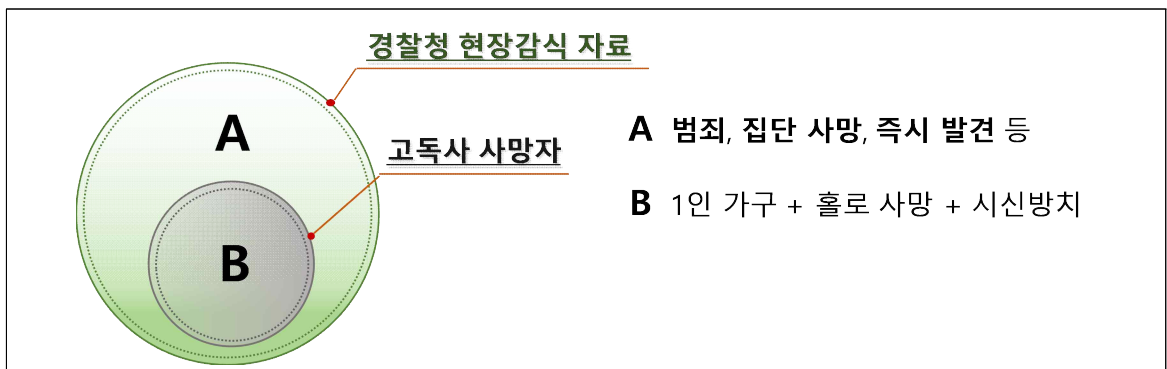


◆ 경찰청 현장감식 자료 <정보보유 기관 : 경찰청>

- (정의) 의료기관 등 밖에서 사망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함에 따라 범죄관련성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사체·환경 등을 조사한 자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26조~제31조, 「변사사건처리규칙」 등

- (고독사와의 차이) 현장감식 자료는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모든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독사는 현장감식 자료 중 범죄, 사회적 교류기록 등을 제외해 산출



2. 고독사 현황 및 특징 (실태조사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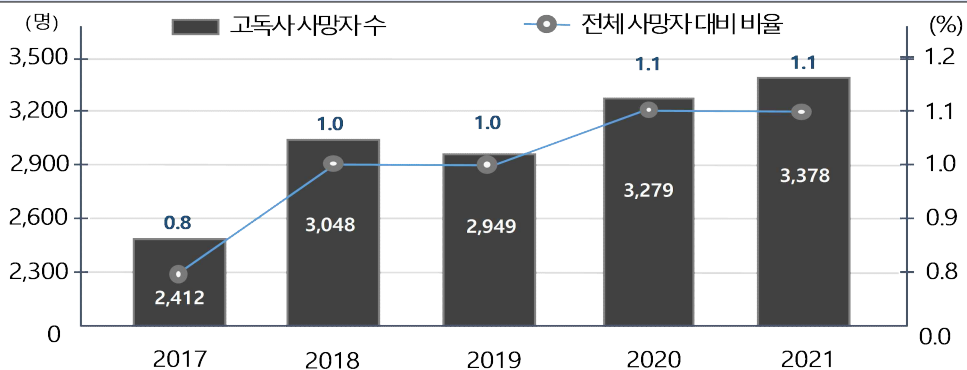
< 고독사 실태조사('22.12.14. 발표) 개요 >

- ◆ 조사내용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
- ◆ 조사방식 : ①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②사회보장급여(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강(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 분석
- ◆ 조사·분석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2.4월~'23.2월)

□ 최근 5년간 고독사 추이

- (고독사 사망자 수)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내외 수준으로, '17년 2,412명에서 '21년 3,378명까지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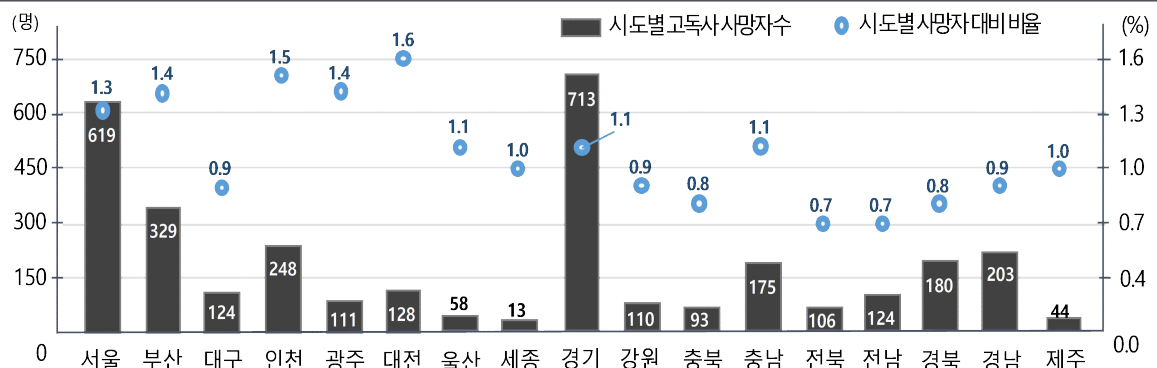
< 최근 5년 간 고독사 추이 >



□ 2021년 고독사 상세 현황

- (발생 지역) 경기(713명), 서울(619명)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전(1.6%), 인천(1.5%) 등은 지역 내 전체 사망자 대비 많은 수준

< 시·도별 고독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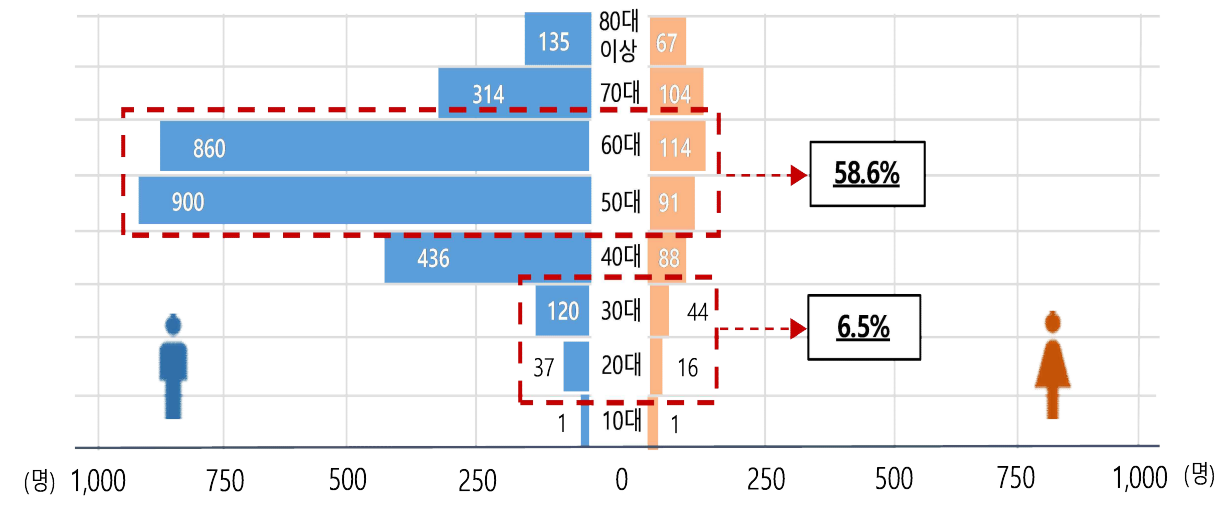
- (성·연령) 남성(84.2%)이 여성에 비해 5.3배 이상 많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 차지, 20~30대(6.5%)도 발생(미상 제외*)

*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성 혹은 연령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 성·연령 동시 감안 시 50대 남성(27.0%) 및 60대 남성(25.8%)이 가장 큰 위기로, 50~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

* 전문기관(서울대행복연구센터, KB금융경영연구소 등) 분석에 따르면,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며, 실직·이혼·사별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상

< 2021년 고독사 현황(성별, 연령별) >



- (발생 장소 및 신고자) 주택(50.3%), 아파트(22.3%)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형제·자매(22.4%), 임대인(21.9%) 등의 신고로 발견

< 고독사 발생 장소 >



< 최초 발견(신고)자 >



- (자살 비중) 고독사 중 자살 비중(17.3%)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 청년층은 자살예방 정책과 연계 통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

* 20대(56.6%), 30대(40.2%), 40대(26.0%), 50대(16.9%), 60대(10.7%), 70대(10.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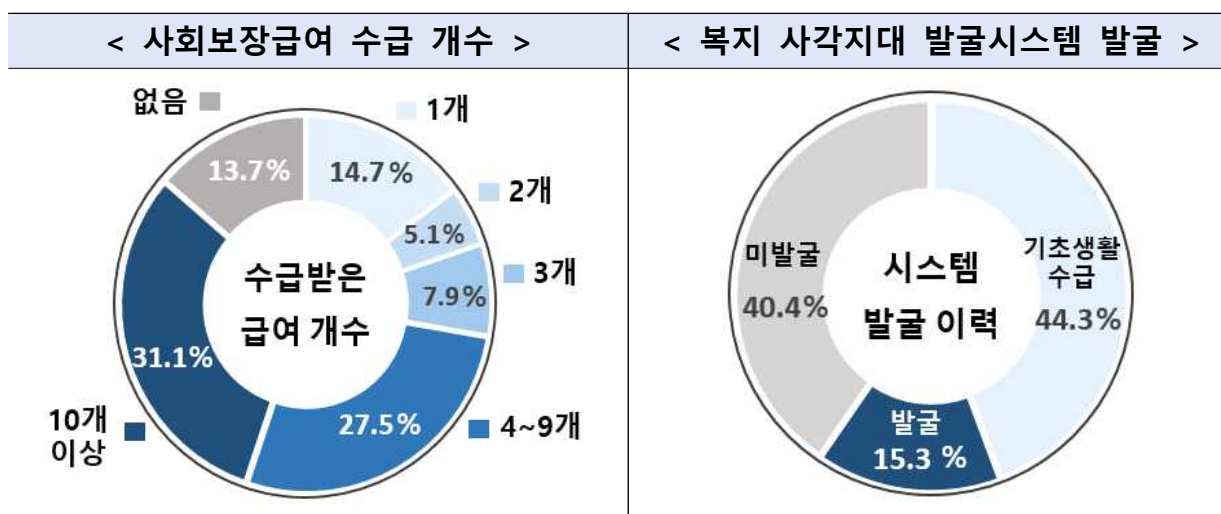
- (사회보장급여 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4.3%)를 포함해 상당수(86.3%)가 각종 사회보장 지원*을 받은 이력 보유(미상 제외**)

* (예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물품지원,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

** 수급이력 확인 과정에서 개인 식별(주민등록번호 부재)이 어려워 분석 제외(446명)

-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일부 발굴(15.3%),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발굴체계 구축 필요

* 위기정보(39종) 분석 통해 조사대상자 선별 → 지자체 조사



- (건강 상태) 고혈압(20.1%), 당뇨병(18.0%), 알코올질환*(12.3%) 병력이 많았으며, 중증질환**(11.1%) 병력도 확인(미상 제외***)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 ** 암, 뇌졸중, 심장질환

*** 건강 상태 확인 과정에서 개인 식별(주민등록번호 부재)이 어려워 분석 제외(350명)

< 연령별 주요 보유질환(보유자 비율)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알코올질환 (8%)	알코올질환 (10%)	알코올질환 (15%)	고혈압(17%), 알코올질환 (17%), 당뇨병(17%)	고혈압(21%), 당뇨병(20%)	고혈압(28%)	고혈압(32%)

3. 고독사 위험군 규모(추정) 및 특징

<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개요 >

- ◆ **조사내용** : 고독사 위험군 규모 및 주요 특징
- ◆ **조사방식** : 주민등록인구('22.10월)를 바탕으로 무작위 추출(지역·성·연령 고려)한 **1인 가구**(9,471명) 대상 **위험군 선별*** 등 온·오프라인 조사
 - * 기준 : 1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0~1회), 하루 평균 식사 횟수(1회),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없음) 등 10개 질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선별
- ◆ **조사결과** :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5만명** 추정(인구 대비 3%, 1인 가구 대비 21.3%)
- ◆ **조사 주관기관** : 한국리서치('22.11월~'22.12월)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 청년(19~29세, 30대) 1인 가구 중 위험군

- (규모) 19~29세의 9.7%, 30대의 16.6% 추정
 - ※ 연령별 1인 가구 수 고려 시 **19~29세 13.8만명, 30대 20.4만명** 추정
- (특징) 가장 힘든 점은 정서불안(42.8%), 경제적 문제(36.2%)이며, 타 연령대 대비 정서지원 욕구가 큼(16.5%)

□ 중·장년(40대, 50대, 60대) 1인 가구 중 위험군

- (규모) 40대의 25.8%, 50대의 33.9%, 60대의 30.2% 추정
 - ※ 연령별 1인 가구 수 고려 시 **40대 24.5만명, 50대 37.3만명, 60대 35.5만명** 추정
- (특징)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문제(39.1%)이며, 타 연령대 대비 일자리 상담 욕구(15.6%)와 사회적 관계 문제(6.6%)가 큼

□ 노인(70대 이상) 1인 가구 중 위험군

- ※ 통계청 통계승인 과정에서 유사 통계(연령별 1인 가구 수 및 사망자 수)가 10세 단위로 산출 중인 점을 고려, 비교·분석 위해 고독사 통계도 10세 단위로 산출
- (규모) 70대 이상의 16.2% 추정 ※ 1인 가구 수 고려 시 **21만명** 추정
- (특징) 가장 힘든 점은 건강 문제(30.4%), 정서불안(27.9%)이며, 청소·세탁(11.5%), 외출동행(8.4%), 병원치료(6.5%) 등 욕구 다양

IV. 비전 및 목표

비전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목표

고독사 발생 감소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
(‘21년) 1.06명 → (‘27년) 0.85명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추진 시군구 확대
(‘23년) 39개 → (‘27년) 229개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고독사 사망자·위험군
실태파악 강화
(기존) 5년 주기 → (개선) 1년 주기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1.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3.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추진전략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1.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2.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추진전략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1.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2.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3.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4.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추진전략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1.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2.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3.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V. 세부 추진과제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 고독사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로서,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의 역할을 확대*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기존) 경제적 취약가구 위주 발굴 → (확대) 경제적 취약가구 +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 누구나 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물적 안전망 구축

①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복지부·지자체**

○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가구가 조기 인지·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가칭)우리마을지킴이**’로 양성(∼’27년) **신규**

* (예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지역 부녀회·노인회, 종교모임 등

** 유사사례(생명지킴이) : 일반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통해 주변의 자살 위험 신호 인지 시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

- 경제적 취약가구 위주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인적 안전망* 대상 고독사 예방 교육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기능 확대

* (예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민간 자원봉사단) 등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학습 지원시스템 마련·운영

○ 시군구별 지역밀착형 상점(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을 ‘(가칭)우리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27년) **신규**

* 현판 부착 등을 통해 지역 내 인지도 제고 추진

- 지자체 방문을 망설이는 대상자가 생활권 내 가까운 상점과의 연결을 통해 쉽게 상담·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복지부**

-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본인 또는 인적 안전망 등이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App)* 구축

* 「(가칭)전 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의 통해 구축 추진

- 지역 내 1인 가구 대상 앱(App) 활용 안내를 통해 위험 정도 자가 진단 및 필요 서비스 등을 사전 입력*하도록 유도

* 입력 결과를 지자체로 연계함으로써 지자체별 위험군 발굴조사·상담 등에 활용

□ 시군구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추진 **지자체**

- 고독사 실태조사로 확인된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은 시군구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실시('23년~) **신규**

*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

- 별도 조사 또는 시군구별 연중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 대상 각종 조사* 등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적극 발굴

* (예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연 1회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조사, 만65세~70세 도래자 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연 6회) 등

②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 **복지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정보 입수 확대 추진

- 고독사 사례 분석(^(가칭)사회적 부검)*을 통한 고독사 위기정보** 지속 개발, 전문가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입수 확대

* '고독사 주요사례 심층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 연구('22.12월~)' 추진 중

** (예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복지부}

○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 개발^{신규}

-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특성을 반영해 연령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 개발
- 각 지역특성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두드러지는 위기정보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차별화된 모형 개발

* 고독사는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특·광역시)에서 주로 발생(고독사 실태조사)

③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복지부}

○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 개발('23년)^{신규}

* 위험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은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로 연계해 집중 관리

- 이미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을 운영 중인 지자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표준화된 점검표 개발·보급

* 서울 : 9개 질문(실패·상실감,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등) 통해 위험군 판단 /
부산 : 12개 질문(사회적고립도, 가구취약성) 통해 위험군 판단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복지부·문체부}

○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23년)^{신규}

* 외로움 측정 중심인 문체부의 '사회적 연결성 척도('22년, 한국심리학회)' 연계·활용

- 온·오프라인 체크리스트 개발·배포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자발적인 행동 변화 유도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 사회적 고립 예방·완화를 위해 지역주민 간 연결 공간 운영, 사회관계망 형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등 추진

①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

□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지자체·복지부

- 시군구별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마련 및 고독사 위험군 등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 운영(∼'27년) 신규

*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 (예시) 커피·점심, 취미활동·생활도움, 공유부엌 등 다양한 목적의 교류 활동 지원

- 시군구 주도로 공간을 확보*하되, 공간 운영은 지역 내 사회복지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의 통해 전문적 운영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활용 또는 지자체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과 연계·추진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연결 공간으로 활용 문화부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 대상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등 참여 유도

* 인문 매개 심리 지원을 통해 위로와 공감, 자존감 회복 등 지원

<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 ▲ (예산규모) '23년 1,285백만원 / ▲ (수행주체) 민간단체 공모·선정
- ▲ (주요내용) 외롭거나 고립된 사람 발굴 및 연결사회 지역거점(5개소, 시도당 1개소) 선정, 인문·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②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부}

○ 지역별 가족센터를 통해 1인 가구 대상 심리·정서적 지원, 소통·교류·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운영 방식은 지역별 가족센터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예시) 청년(소통·교류 등), 중·장년(자기돌봄 등), 노인(건강한 노년 준비 등)

<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여성가족부) >

▲ (예산규모) '23년 1,838백만원(국비) / ▲ (수행주체) 가족센터(전국 244개소)

▲ (주요내용) 1인 가구 고독·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예시: 슬기로운 1인 생활(대구), 1인·1일·1취미 프로젝트(인천)

□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지자체·복지부}

○ 사회복지관(475개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 지원

* 사회복지시설 평가(사회복지관)에 '주민관계망 형성 실적'을 확대 반영('24년~'26년)

-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독거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에서 건강(해독)음료 생산·배달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 활동 실시(부산 북구)

- 사회적 고립가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가족공동체* 등 형성 지원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경제·돌봄 등)를 공동으로 대처

* 각종 법·제도적 권리·책임 바탕의 엄격한 결합보다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2~5인)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바탕의 느슨한 가족 결합 형태로 추진

③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 복지부·지자체

-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등 지원(~'27년) 신규

* (예시) 주 1~2회 AI 안부 전화를 통해 대상자와 폭넓은 일상대화 추진

※ AI 케어 효과성 평가 결과 우울감 감소 63.5%, 외로움 감소 65.9% (전남대, '23.2월)

-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등 대상 주기적인 복지욕구 확인 및 위기징후 감지

< 인공지능 복지도우미(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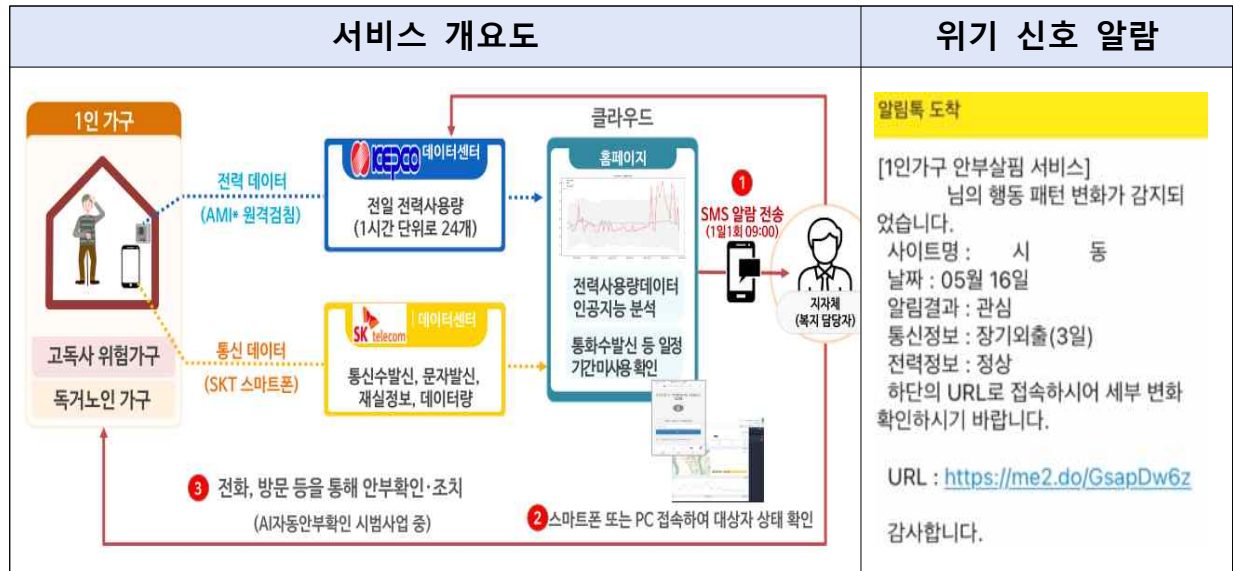
□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복지부·지자체

-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27년) 신규

※ 전력·통신 :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한국전력공사·통신사) / 15개 시군구('23년)

수도 : 위기 알림 서비스(한국수자원공사) / 19개 시군구('23년)

<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한전·SKT 협업) >



- 지자체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대화서비스 연계 후 이상 징후 감지 시 지자체에서 안부 확인 추진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2년, 17.4만명 대상)*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응급상황 감지·대처 지속 추진

*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한 ICT 기기가 응급상황 감지 시 119 등 통해 신속 구조

** 낙상 감지 레이더, 활동량 감지기, 온도·조도·습도 감지기 등

□ 공공임대주택 내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LH) 내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군의 응급상황 신속 파악을 위해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 세대 내 활동량, 에너지(수도·온수·가스) 사용량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감지 시 관리사무소로 알림 전송 → 관리사무소에서 신속히 안부 확인

- 스마트홈 플랫폼 적용 곤란한 기존 임대주택은 스마트 돌봄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시범사업 추진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 지원

- ◆ 생애주기별·분야별 다양한 정책에 '고독사 예방'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신설 및 기 운영 중인 서비스를 고독사 위험군에게 유기적 연계

①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21년)

- ▶ 청년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은 20대는 56.6%, 30대는 40.2%로 집계
- ▶ 청년 위험군의 가장 힘든 점은 정서불안(42.8%)과 경제적 문제(36.2%)이며, 타 연령대에 비해 정서지원 서비스 욕구(16.5%)가 높음

□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

- 일정기간 이상 외출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거주 중인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개념, 생활 실태 및 복지 수요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23년)
 -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24년)

□ 청년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25년~)
-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 위험군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청년마음건강 특화사업**으로 연계해 집중 지원

* 사전·사후검사 통한 문제 파악, 1:1 전문심리상담 실시(3개월, 10회)

** 정신증 진단받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만성화 예방, 일상회복 지원

□ 구직단념청년 예방·관리 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복지부

-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위험군 등 대상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
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준비금(참여수당) 연계·지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

- ▲ (사업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21개 질문)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 ▲ (지원내용)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 제공, 이수 시 인센티브 제공
- ▲ ('23년 확대) (기존) 단기 프로그램(1~2개월) → ('23년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5개월)
 - 청년도전준비금(300만원 / 중·장기 프로그램 5개월간 월 50만원씩, 이수 시
인센티브 50만원) 제공

-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고용센터 간 연계·협업*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자립수당 월 35만원 → 40만원 인상('23) 및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 검토,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지급 지자체 권고('23) 등

- 청년 위험군 등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위해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연계 통한 직무역량 향상 지원

* 기업탐방형(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형, 인턴형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속 확대를 통해 청년 위험군 등의 취업
촉진 및 기업의 청년고용 유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정규직 채용 후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22년) 1년간 960만원 지급 → (‘23년 확대)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②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21년)

- ▶ 50~60대는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는 연령대
- ▶ 중·장년 위험군의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문제(39.1%)이며, 타 연령대에 비해 일자리 상담 욕구(15.6%)와 사회적 관계 문제(6.6%)가 큼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 제공 복지부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 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추진('24년~)

* 보건소에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존)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중심 → (확대)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추가

□ 중·장년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복지부

- 타 연령층(청년·노인)에 비해 제도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중·장년의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신설('23년~) 신규

*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서비스 개발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발표 예정

□ 개입거부 중·장년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 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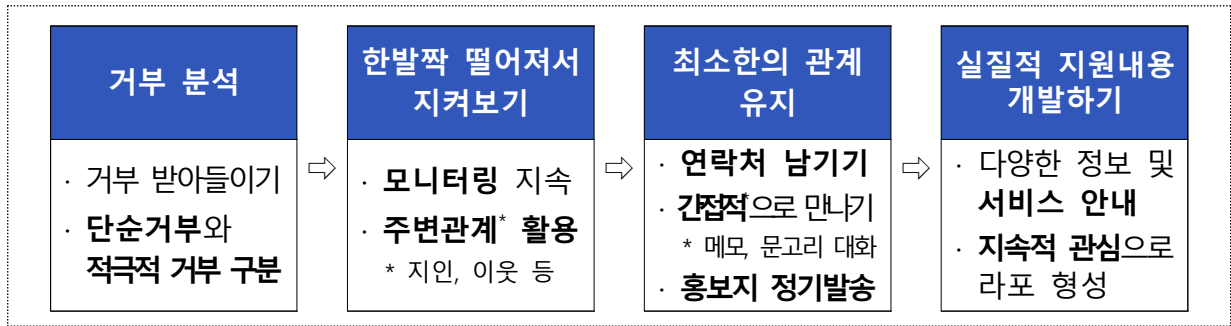
-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 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모델 마련 신규

※ 중·장년을 포함하여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

- 지자체 상담을 지속 거부하는 위험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촉진 생활 쿠폰* 등 지원 통해 고립적 일상 변화 유도

* (예시) 고립적 일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역상점(편의점, 미용실, 빨래방 등) 쿠폰

<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개입거부 가구 대응 절차(안) >



□ 조기퇴직한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46개소) 및 중장년내일센터(31개소) 연계를 통해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전직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 퇴직한 전문인력*(50~70세 미만)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 강화

*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

< (예시)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고용노동부) >

-
- ▶ 숲 해설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숲 해설을 통한 환경교육 및 산림치유 일자리 사업에 참여
 - ▶ 가전·기계 분야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후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냉·난방기 분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
-

□ 중·장년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화 교육부·지자체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이 중·장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건강관리, 안전, 금융, 디지털 역량(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등의 교육내용을 사업공모 시 예시로 포함

③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21년)

- ▶ 중·장년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로서, 병원·시설이 아닌 재가에 거주 중인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communit-care) 구축 필요
- ▶ 노인 위험군의 가장 힘든 점은 건강 문제(30.4%)이며, 청소·세탁(11.5%), 외출동행(8.4%), 병원치료(6.5%) 등 욕구 다양

□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부

○ 노인 위험군 등 대상 의료·건강관리·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구성 등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 거동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택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기타 부족한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보충적 개발·제공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 (대상지역) 12개* 시군구 / ▲ (추진기간) '23.7월~'25.12월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 (주요내용)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 상에 있는 돌봄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및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복지부

○ 노인 위험군에게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

* 개인맞춤형 상담을 통해 우울증 진단, 사회적응 프로그램, 외부활동 지원 등 제공

** (기존) 안전·안부 확인 중심 → (확대)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등) 지원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구축^{복지부}

○ 노인 위험군과 자원봉사자 간 1:1 결연 확대 및 돌봄영역(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를 통한 지지체계 구축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정서지원 등을 위해 공공·민간기관* 등 자원봉사자와의 1:1 결연·서비스** 확대

* '22년 기준 총 136개소(국민연금공단, SK하이닉스, hy사회복지재단 등) 참여

** 사랑잇는전화(주 2~3회 말벗서비스), 마음잇는봉사(방문봉사, 후원금·품 지원)

- 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통한 생계·정서지원 등을 위해 돌봄영역(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 효과성 평가 결과 돌봄제공수급 노인 모두 외로움건강 개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2.12월)

< 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 개요 및 내실화 방향 >

▲ (현황) '22년 돌봄제공자 6.2만명, 돌봄수급자* 9.0만명

*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지역 내 보호 필요성 높은 노인

▲ (내실화 방향) ①돌봄제공자의 적정 역할 범위 설정 및 교육 체계화 ②사전 수요조사 통한 돌봄제공자·수급자 매칭 ③지역거버넌스* 기반 사업모형 도입 등

* (기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추진 → (개편) 지자체 중심으로 수행기관 간 연계·협업

□ 사전 장례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복지부}

○ 노인 위험군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 확산

- 사전에 장사 방식(매장, 화장 등), 빈소유무, 장례 규모·방식 등을 결정하는 (가칭)사전장례의향서 도입('24년~)
-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사업 도입(~'24년) 검토

④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복지부·지자체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도 제대로 된 공영장례*가 이뤄지도록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 및 장례지원 지속 확대

* 인수자가 없는 시신 매장·화장 이전에 지자체가 빈소마련 등 장례의식 추진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현재 101개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 중

- 혈연 중심 장례문화 탈피 및 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해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추진('23년)

* (현재)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확대)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친구·이웃·사회단체 등

□ 고독사 유가족·관계자 지원 복지부·지자체

- 정신적 외상(trauma) 후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을 돕기 위해 유가족·관계자 등 대상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신규

- 장례지도사의 직무 범위* 연구(~'24년)를 통해 장례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 질적 개선('25년~)

* 유품정리·신변정리·상속 정보 등 서비스 제공, 웰다잉 교육 및 유족상담(애도상담) 등

□ 고독사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 복지부·지자체

-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고독사 현장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검토('24년~) 신규

※ (예시) 일본 나고야시는 시민복지를 위해 '22년부터 시에서 고독사 관련 '포괄적 손해보험'의 보험료(1,000채 기준 약 220만엔)를 전액 부담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 체계(조직·인력·시스템·예산 등) 구축
- ◆ 지자체, 복지관 등의 고독사 예방 업무 적극 수행을 위한 법·제도 보완

①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복지부·지자체

- (중앙)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앙 단위 전문기관 지정 신규

- (지역)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센터 지정 신규

※ 서울시는 '23년부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內)' 설치·운영

- 지역 내에서 유사업무 수행 중인 기존센터*를 최대한 활용·지정

* (예시) '사회복지관(475개소)', '가족센터(244개소)',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 지자체 업무수행 기반 강화 복지부·지자체

- 희망복지지원단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단계적 증원 및 권한 확대

- 통합사례관리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단계적 확대해 사례관리 내실화 및 조직 내 효율적 업무 분담 추진

□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23.3.23, 상임위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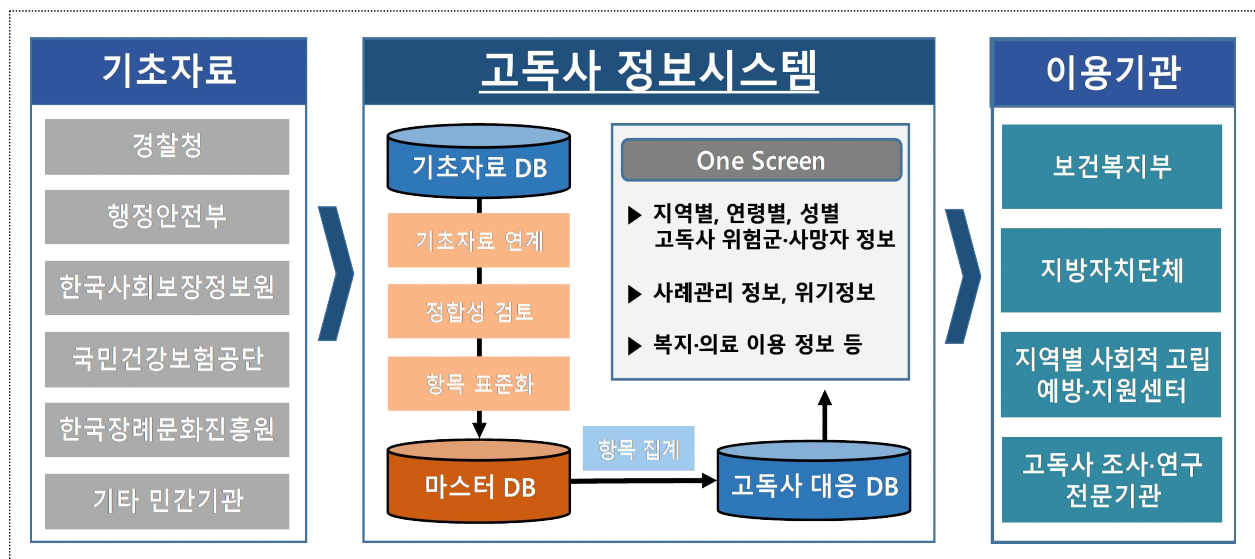
○ 고독사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및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 위기정보* 식별 및 위험군 발굴 기능 구축

* '고독사 주요사례 심층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 연구('22.12월~)'를 통해 검토

< 고독사 정보시스템 개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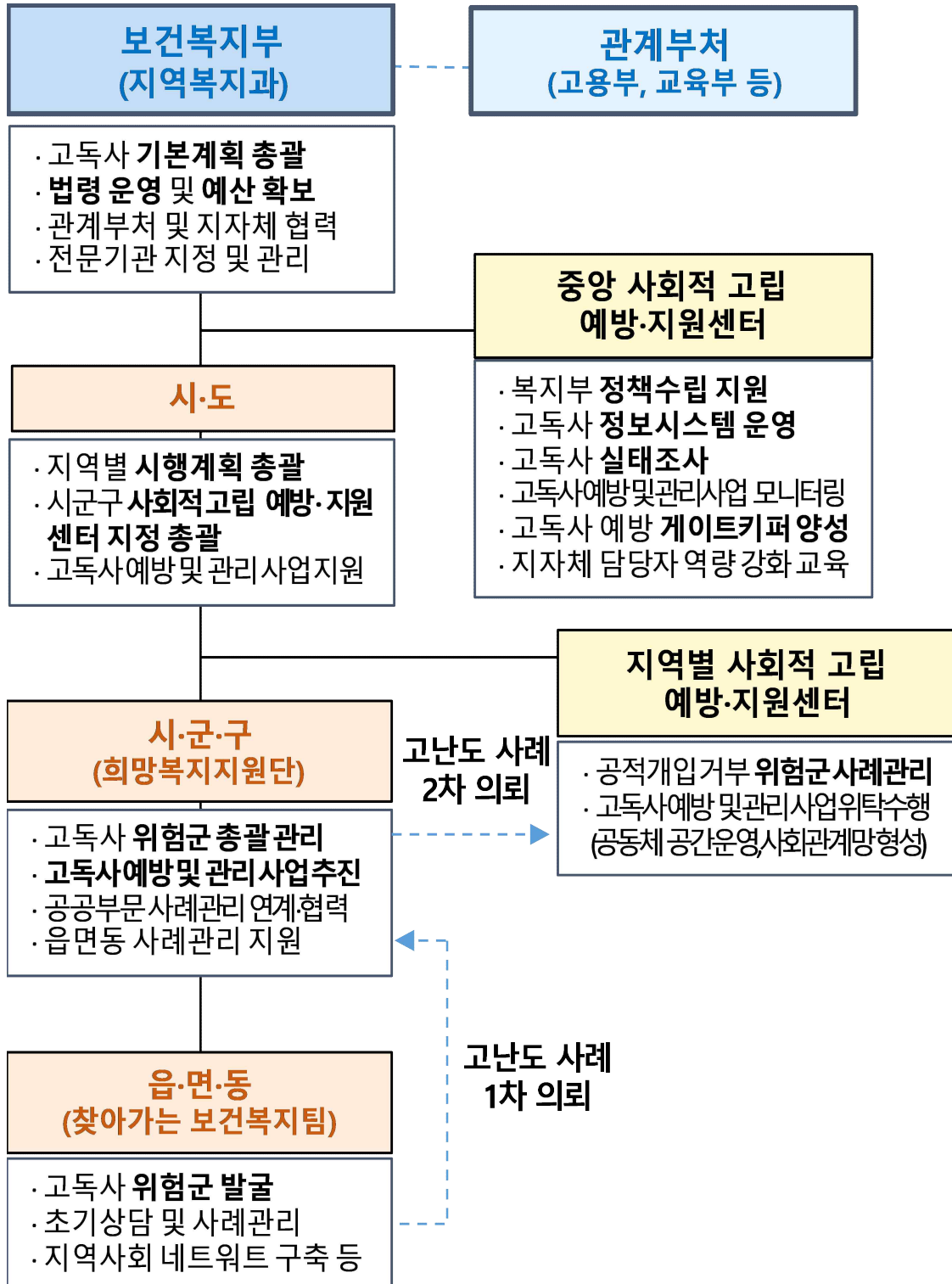


□ 주기적인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파악 ^{복지부}

○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실태 파악('24년~) ^{신규}

○ 매년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 위기요인,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24년~) ^{신규}

〈참고〉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안)



※ 고난도 사례 예시 : 지속적인 상담·사례관리 참여 거부,
장기간에 걸친 신뢰형성을 통한 관계망 형성 필요 등

②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 실시 복지부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중앙부처·지자체 서비스 전수조사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23년~) 신규

- 조사결과는 지자체 안내를 통해 지자체 내에서 연계·조정* 및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부처(부서)별 유사 서비스 현황을 파악 못해 연계·조정을 못하는 지자체 다수

□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서 일부 시도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조속 확대 건의문 채택('23.3.13.)

** (예시) 의료·요양·복지·장례 등 인프라 수준, 유희공간 여부, 민·관 협업 경험 등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 (기간) '22.8월 ~ '23.12월 (1년 5개월) / ▲ (예산) 총 3,510백만원

▲ (대상지역) 9개* 시도(39개 시군구)

* 서울(20개), 부산(6개), 대구(3개), 울산(2개), 경기(1개), 강원(2개), 충북(2개), 전북(1개), 경북(2개)

▲ (주요내용) (공통)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선택)4개 서비스 유형 중 1개 이상 수행

선택 구분	주요내용
안부확인형	지역 내 인적 안전망 구축, AI·IoT 및 빅데이터 활용 모니터링 등
생활지원형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소셜다이닝, 건강교육, 이동지원 등
심리지원형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등
사후관리형	사망자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등

③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복지부·경찰청

- (정의 보완 및 시스템) 가족 단위 고립·사망을 고독사 범위에 포함, 고독사 현황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사전협의 및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통해 개인정보 목적 내 사용 엄격 관리

<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심의 현황 >

구 분	내 용	비 고
고독사 정의 보완	고독사 요건 중 '홀로 사는 사람'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사는 사람'으로 보완	상임위 통과('23.2.24.)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활용 등	상임위 통과('23.3.23.)

- (위기정보 입수)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보 입수 근거 마련 신규
- (정보 연계) 각 지역별 발생한 고독사 의심사건에 대해 '시·도 경찰청 및 시·도청 간' 정보연계* 근거 마련 신규
 - * (예시)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청장에게 정보 제공 요청 → 일정 주기별 관련 정보 회신
- (전문기관 지정)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신규

□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 복지부

- (평가) 지자체·사회복지관 평가 강화를 통해 적극적 업무 독려
 - (지자체)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 실적을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 평가지표로 반영 및 평가결과 환류

*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계획 수립('23.上) → 평가 실시('23.下~)

- (사회복지관) 복지관의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 및 주민조직화 사업 실적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확대 반영

* 평가지표 확정 및 '27년 평가('24년~'26년) 지표에 반영 → 평가 실시('24년~'26년)

- (포상) 우수 공무원 및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대상 포상('24년~)

□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추진 복지부

- '(가칭)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가칭) 고독사 예방 활동 주간(고독사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 운영 검토 신규

* 적정 날짜는 대국민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결정

-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23년~) 신규

- 유튜버·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기획영상 제작, 국민참여형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공모 등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운영 복지부

-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추진동력 유지를 위한 공론의 장* 주기적 개최('23년~) 신규

* 관계부처·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관·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VI. 향후계획

□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조체계 강화

- 기본계획 과제 적극 이행 및 보완 필요과제 지속 발굴을 위해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등 주기적 개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충*되는 조례는
법률 내용에 맞춰 개정되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예시) 고독사 대상자를 특정 연령(50세이상 또는 60세이상 등)으로 한정

□ 이행 관리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계획 수립) 기본계획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 조속 수립
 - '23년 6월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별 '23년 하반기 시행계획 수립,
'23년 12월 말까지 '24년 시행계획 수립
- ※ 각 연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지침 교육 예정('23.5월, '23.10월)
- (실적 평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보건복지부장관)해,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보고 및 관계부처·지자체에 결과 통보

〈참고〉 후속 연구 · 논의과제(안)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인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해 논의 ⇒ 추가 논의과제 지속 발굴

①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고독사 위험군 및 위기수준 판단 등을 위한 점검표 개발

※ 각 지자체별 사정도구·기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사정도구·기준 마련

②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

○ 고독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생애 주기별·지역특성별 예측모형 개발

③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 고독사 관련 환경 분석,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방안 마련, 시스템 기능별 요구사항 도출, 미래모델 설계 등

④ 고독사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종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이용자 대상 정기적 상담·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근거 : '고독사예방법'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⑤ 고독사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서비스·인프라 재구조화

○ '고독사예방법' 및 대상자별·서비스별 관련법령 개정 수요 검토

○ 기관별 분절된 서비스·인프라 연계를 위한 재구조화 방향 검토

VII. 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주 관	협 조	추진일정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1-1.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①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자체		~'27년
②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복지부 (지역복지과)	-	~'27년
③ 시군구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추진 신규	지자체	-	'23년~
1-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	복지부 (지역복지과)	-	~'27년
②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7년
1-3.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①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3년
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문체부	'23년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2-1.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			
①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신규	지자체	복지부	~'27년
②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연결 공간으로 활용	문체부	-	'23년~
2-2.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①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부	-	'23년~
② 사회적 유대 형성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지자체	-	'23년~
2-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복지정보기획과)	지자체	~'27년
②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노인정책과)	지자체	~'27년
③ 공공임대주택 내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국토부		'23년~

세부 추진과제	주 관	협 조	추진일정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3-1.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①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 (청년정책팀)	-	'23년~
② 청년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3년~
③ 구직단념청년 예방·관리 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복지부 (아동권리과)	'23년~
3-2.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 제공	복지부 (건강정책과)	-	'24년~
② 중·장년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신규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23년~
③ 개입거부 중·장년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7년
④ 조기퇴직한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	'23년~
⑤ 중·장년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화	교육부, 지자체	-	'23년~
3-3.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①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	'23년~
②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복지부 (노인정책과)	-	'23년~
③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구축	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	'23년~
④ 사전 장례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노인지원과)	-	'24년~
3-4.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① 사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복지부 (노인지원과)	지자체	'23년~
② 고독사 유가족·관계자 지원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노인지원과)	지자체	~'27년
③ 고독사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자체	'24년~

세부 추진과제	주 관	협 조	추진일정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4-1.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①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신규	복지부(지역복지과) 지자체	-	~'27년
② 지자체 업무수행 기반 강화	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자체	~'27년
③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7년
④ 주기적인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군 실태파악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4년~
4-2.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①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 실시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3년~
②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지역복지과)	-	~'27년
4-3.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① 고독사 예방법 개정	복지부 (지역복지과)	경찰청	'23년~
②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	복지부 (지역복지과)	-	'23년~
③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추진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7년
④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운영 신규	복지부 (지역복지과)	-	'23년~

☞ 기본계획('23~'27) 총 소요 예산은 약 3,907억원* (잠정치, 국비 기준)

* '추진전략 3'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중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은 서비스는 소요재정 추계에서 제외

(단위 : 백만원)

계	'23년	'24년~'27년
390,682	35,057	355,625

※ 각 과제별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